

“앗! 속았다”... 중고거래 늘자 사기·분쟁도 폭증

물품 대금만 가로채고 연락두절...흡집 난 명품 가방 환불 요청에 “불가” 지난해 분쟁조정신청 3271건, 361% 폭증...물품정보 제공 강화 필요

광주에 사는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넷플릭스’ 계정을 공동구매(사용)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1년 치 사용료 3만5000원을 입금했다. 4분의 1 가격에 최신 영화를 맘껏 볼 수 있었다는 기대도 잠시, 계정 구매가 늦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글 게시자와 연락이 끊겼다. 물품 사기를 당한 것이다. 지난 1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김씨는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생각에 공동구매를 결정했는데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고 하소연했다.

30대 직장인 박모(여)씨의 경우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딱 한 번 사용한 명품 가방’이라는 말을 듣고 반값에 샀다가 후회가 크다고 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반값에 물품을 받고 보니 일부 흡집이 있고 사용한 흔적이 뚜렷했기 때문

이다. 박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더니 환불은 절대 안 된다는 말에 소송을 걸어야 할지,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사기 사건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어팟·노트북 등 전자제품과 의류, 소품 등이 거래되던 중고물품 사이트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농기구·차량 등 ‘거의 모든 세상의 물건’이 거래될 정도로, 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고물가 시대 지출을 줄이려는 20~30세대를 겨냥한 물품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폭증하는 추세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정보통신기술(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

된 중고거래 조정신청은 모두 3271건으로 2020년(906건) 대비 361% 증가했다. 주요 3사 거래 플랫폼별로는 번개장터의 경우 2020년 121건→2021년 973건(704%), 당근마켓 2020년 352건→1620건(360%), 중고나라 173건→780건(351%)으로 늘었다.

분쟁은 주로 ▲스마트폰·에어팟 등 전자제품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공동구매 의류·중고 명품가방 환불을 놓고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큰 폭으로 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7월 당근마켓 등 주요 3사와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거래 방식 개선을 유도하고 나섰다.

특히 분쟁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물품에 관한 필수 정보가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물품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에 접수되는 물품 사기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지만, 광주 5개 경찰서에 접수되는 물품 사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다.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은 주로 사용기한 지난 기프티콘 판매 후 연락 두절, 물품 대금만 가로챈 사건 등이라고 한다. 피해 신고가 정식 접수되면 경찰의 수사는 시작되지 않지만 강력사건이 아니어서 사건 해결까지 2~3개월이 걸리고,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할 경우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분쟁 조정 신청, 사실관계 조사, 합의 권고, 합의 불발 시 조정, 조정안 수락 권고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통계를 잡지 않는 분쟁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부터 물품 정보까지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낮 도심서 행인들 흥기로 질러 광주남부경찰, 50대 남성 검거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대낮에 행인들을 잇따라 흥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18일 오후 3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인근에서 A(55)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월산사거리에서 60대 남성 2명의 옆구리를 흥기로 잇따라 찌르고 도주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손바닥만한 흥기로 옆구리를 찌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거주 중인 광주 송정역 인근 자택에서 흥기를 들고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자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외교부 의견서 공개 시민모임 “정부가 선고 보류 주문...재판 개입”

오늘 ‘심리불속행 기각’ 마지막 날 대법원 어떤 결정 내릴지 주목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18일 일제 강제동원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명령과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정부가 대법원에 선고 보류를 주문하면서 재판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 의견서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의견서에는 “우리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하고 있음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2차례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모아 일본측에 충실히 전달했다”, “외교 장관 회담, 차관협의, 국장협의 등 외교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정부가 외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일방적 기대감과 근거없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재판부에 판결 보류를 주문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관협의회”를 근거로 삼은 것도 미쓰비시 측이 재항고 이유 보충서에 적은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외교부가 오히려 미쓰비시 측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민관협의회는 외교부의 독자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피해자측 대리인 및 지원단체는 단 한 차례도 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견서에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은 미쓰비시의 현금화명령 재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앞둔 시점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재항고 이유가 헌법 등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면 재항고를 기각해 더 이상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사건은 접수 4개월째인 8월 19일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집행(현금화명령)을 중단할 사유가 없어져 즉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19일까지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재항고 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만 하며 그만큼 강제집행도 늦춰지게 된다.

시민모임은 “피해자의 권리실현이 임박해진 마당에 끼어들어 재판절차를 미뤄달라고 한 것은 가해자 전범기업의 승리를 트여주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국가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기업의 국내 특허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 특별현금화 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업은 한일정구권 협정상 배상 책임이 없다며 명령에 불복하고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한 상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국 1호’ 북구 만다비체육센터 개관 18일 ‘전국 1호’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북구만다비체육센터 개관식에서 초등학생들이 휠체어 배드민턴을 체험하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심평원에 진료기록부 제출 거부한 의사 2심도 벌금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거부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유효영)는 의료급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의사 A(여·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시 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1월 23일 의료·요양 급여 징수 적정성을 살피

러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받았는데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참여 없이 현지 조사가 이뤄져 위법하다. 조사 및 자료 제출 거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은 자신의 명의로 이뤄지면 충분하다. 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휴가철 초인종 놀러 빈집 확인 절도

여수경찰은 휴가철 빈 아파트만 골라 침입한 뒤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60대 남성 A씨를 특별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여수와 순천 등 전남과 경남 일대 아파트 7곳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한 뒤 대형 드라이버를 이용해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경찰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범행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